종단 법인 관리 토대 · 종도 의무 강화

조계종 법인법 수정 제정 의미와 과제

법인법 제정안이 조계종 중앙종회 제19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1년 3월 첫 발의된 법인법이 2년의 시간을 거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한 취지는 명확하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이 111개로 지자체에 등록한 법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인에 대한 종단 등록과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회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승 스님은 "법인 관련자들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수행하고 전법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권한과 의무는 마주보며 가야하는 것이기에 다른 종도와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종헌 종법체계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두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법인법 제정에 따라 종단은 종도와 사찰들이 설립한 법인들의 등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등록 시에는 종법령이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반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법인 정관에 조계종 소속 승려가 법인 이사의 2/3 이상이 재가 이사는 종단 등록 신도로 규정하도록 해 종단과의 소속감을 높였다.

조계종 유지재단, (재)선학원, (재)조계종 대각회는 이사 전원이 종단 승려여야

1년 內 법인들 종단 등록
2/3이상 종단 승려 이사로
선학원에 6개월 유예기간

법인들 반대 의견 많아
법 이해 · 조율은 숙제로

하며, 선학원 이사 중 1/3은 종단이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선학원에 대해서는 법 적용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인은 법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재산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사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종단이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항도 명시됐다. 미등록 법인의 임원과 산하 사암의 재산상 권리인과 관리인은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받으며, 종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종도와 사찰이 설립한 법인들의 현황 파악과 관리는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인법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종단과 법인과의 온도 차가 현격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장 반발이 심한 곳은 선학원과 대각회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소속 사찰 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한 도업 스님은 "법인법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인을 현재의 법으로 소급해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며 "주지 임명과 사찰 운영에 침해 요소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법인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학원의 경우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선학원은 〈불교저널〉편집장 칼럼을 통해 "조계종 집행부가 남다른 의지로 관철시킨 법인법은 그러나 선학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법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에 등록해 검증된 법인들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단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사단법인 관계자는 "당대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후대로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법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종회를 통해서 선학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학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법인 간 이견이 많은 만큼 논의 대상을 일선 법인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법 안에서 세부적 의견들을 수렴해 종령과 세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관리의 씨앗을 뿌린 조계종 법인법이 향후 어떤 열매를 맺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철 스님 열반 20년 사업 '다채'

백련불교재단, 4월 8일 '육조단경 강좌' 등 연중 전개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성철 큰스님 열반 20주년을 맞아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8일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대강좌'를 시작으로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기념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대강좌는 선(禪)의 기원을 육조혜능 스님의 육조단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성철 스님의 평소 뜻과 육조혜능 열반 13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강좌로 4월 8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 7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대강좌 동참비는 15만 원이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 스님의 사상과 육조 혜능 선사의 사상의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해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우 스님의 기조법문을 시작으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혜능과 한국 선불교 전통'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의 '혜능, 성철 그리고 현대인의 사상적 지형'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도 재개 된다. 3월 30일 예산 수덕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3월 17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 혜원 스님에 감사패 전달

한마음선원, 동국대 경주선센터 기금 1억원 지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계영 총장은 3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방문, 정기법회 후 혜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마음선원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선센터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후원한 1억원 기부에 대한 것이다.

혜원 스님은 "학교와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더욱 큰 일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故 대행 스님과 주지 혜원 스님 그리고 한마음선원 신도께서 평소 깊은 애정으로 본교를 후원해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나은 기자**

고소·퇴임 촉구… 불교방송 파국 치닫나

BBS 노조 비위로 이사장 고소
사장 퇴진 놓고 공방 이어져
오는 28일 이사회 결과 '주목'

노조가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리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이 '이채원 사장 사퇴 촉구 법회'를 여는 등 불교방송 이사장과 사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가 사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사태가 파국 국면에 다다랐다. 불교방송 노조가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리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은 '이채원 사장 사퇴 촉구 법회'를 여는 등 이사장과 사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전영신)는 3월 18일 조계사 내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고 3월 20일 횡령 · 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사장 영담 스님을 검찰에 고소했다.

불교방송 노조는 이날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교방송 이사회와 불교계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내 각종 비리를 밝히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불교방송노조는 △불교방송 이사회의 진상규명 소위 구성 △이사회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이채원 사장 흔들기 중지 △뮤지컬 원효 및 대구불교방송 사옥마련 의혹 해소 △후원회 사용내역 조사 후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월 13일부터 방송을 중단한 성전 스님 등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은 3월 21일 불교방송국 앞에서 '불교방송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열고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스님들은 "이채원 사장의 발로참회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주동자 색출에 내몰렸고 고뇌에 찬 문제제기가 줄서기라고 폄하당하는 일들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前진행자 스님들의 신도들이 버스를 대절해 참석하는 등 사부대중 5백 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이채원 사장 사퇴'와 '불교방송 정상화 촉구' 등을 외쳤다.

현재, 교계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과 이채원 사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힘겨루기가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 이사회에서 이채원 사장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숙 기자**

종단협 소속 종단 자살예방센터 운영해야

종단협 인권위, 18일 기자회견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방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종단협 인권위)는 3월 1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종단 내 자살예방센터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 정책은 외형적인 성공은 가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노인문제 등과 함께 자살공화국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한 개혁으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균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계는 자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각 종단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